

목 차

■ 2007년 통일 정책 목표와 실천 과제

Executive Summary	1
I.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	2
II. 2007년 통일 정책 목표	7
III. 통일 정책 4대 실천 과제	12
< 토론 >	13
■ HRI 경제 지표	33

2007년 통일 정책 목표와 실천 과제

□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

- **2006년 통일 정책 평가**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가 6개월 이상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민간의 경험 부문에서는 큰 성과가 시현됨
- **2007년 한반도 정세 분석** : 2007년 북한은 식량난 완화와 경제 실리 추구를 위해 대남 관계 및 북핵 문제에 긍정적 자세 변화가 기대됨
 .(심각한 식량난) 식량 부족으로 인해 2007년은 혹독한 겨울과 어려운 춘공기가 예상됨
 .(대남 관계) 북한은 경제 실리 확보와 남한내 反보수 대연합 실현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북핵 문제) 북미 모두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보다 긍정적·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됨

□ 2007년 통일 정책 목표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본격 가동** : 정부는 6자회담 진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상호 보안을 위한 남북 대화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
- **교류 협력의 일관된 추진** : 교류 협력은 안정적인 남북 관계 유지를 위한 기본 틀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경분리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법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해 나갈 예정임
- **인도주의 지원의 체계화·효율화 추구** : 그동안은 국제기구와 민간기구, 정부 차원의 3갈래에서 지원해왔으며, 향후 체계화를 해 나갈 방침임
- **남북간 신뢰 제고** : 남북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호 약속과 합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그동안의 약속과 합의를 재점검해 볼 예정임
- **국민적 합의 기반 확보** : 평화 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통해 '평화'의 가치와 이념에 대한 기성세대와 청소년 간의 인식의 격차를 좁혀나갈 계획임

□ 통일 정책 4대 실천 과제

- **4대 당면 과제** : ①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 단계 돌입, ② 인도적 대북 지원의 체계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③ 북한의 경제적 변화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계획 및 노력, ④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공동 해결 등을 4대 당면 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임

2007년 통일 정책 목표와 실천 과제

- 출처 :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
- 일시 : 2007년 1월 24일
- 연사 : 이재정 통일부 장관
- 주최 : 중앙일보,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I.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

제가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에 참여하면서 언제 한 번 이 자리에 앉아보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15번째 포럼에서 영광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우선 초청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2006년 통일 정책 평가

2006년을 돌이켜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5일에 북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10월 9일에 핵실험을 함으로 해서 남북 관계는 우리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질주해 갔습니다. 그 결과 유엔 안보리가 10월 15일에 제재 결의를 했고 우리 한국 정부는 이 제재와 함께 동참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 미사일 발사와 장관급 회담이 중도에 결렬 상태에 가면서부터 정세가 험악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쌀 비료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하던 수재 물자 지원도 중도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합의됐던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을 통해서 옥수수 5만 톤을 지원하는 등 국제 기관을 통한 여러 가지 지원 물자 지원도 다 중단이 되고, 물론 남북간의 대화도 끊어진 상태에서 벌써 6개월 이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11월 18일에 미국 부시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종전 선언의 가능성을 선언적으로 얘기하면서 평화 체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어서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6자 회담이 재개되면서 작년 말에 비로소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되어 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의 대체적인 하나의 경향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민간 차원이나 또는 경제 관계의 남북 관계는 상당히 호황을 이루었다고 얘기할 만큼 여러 가지 좋은 실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2006년 남북 왕래 인원을 계산해 보면 101,708명으로 처음으로 10만 명대에 진입을 했고, 88,000명을 기록했던 2005년도의 기록에 15%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경의선, 동해선을 통해서 왕래한 인원도 무려 35만 명이 넘어서 하루 1,000명이 넘는 인원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통해서 왕래를 했고 차량의 경우는 하루에 200대가 넘게 왕래하여, 지난 해 모두 62,287대가 왕래하는 큰 실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 평균 북한 내 체류한 우리 국민이 매일 1,500명 정도가 되는 과거에 비하면 놀라운 발전을 만들어 냈습니다. 만일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없었다면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볼 통계 자료는 남북한 선박 운행 횟수인데 2002년에 1,827회가 2003년에 2,000회로 넘어갔고 2004년에 2,100회, 2005년에 두 배가 넘는 4,497회, 2006년에는 2005년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8,401회의 선박이 남북간에 운행했다는 것이다. 2002년도에 1,827회에 비해서 거의 네 배가 넘는 남북간의 운행 횟수가 증대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괄목할만한 성장이고, 이 수치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교역액으로 본다고 하면 13억 5천만 달러로 2005년도에 비해서 27%가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결국 단순한 통계 수치만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 및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있었고 경제계도 큰 동요 없이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평을 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06년은 안정적 남북 관계 유지가 결국 일관된 평화 번영 정책 추진 성과가 아니었나 하고 평가를 해 봅니다. 물론 평화 번영정책 아래서 미사일 발사가 되고 핵 실험을 했는데 무슨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공격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차치해 놓고라도 남북 관계 여러 가지 통계적 수치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적어도 상당한 안정적 진행을 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2007년 한반도 정세 분석

2007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상당히 빠르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2007년은 총체적으로 볼 때 김정일 총비서가 추대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고 신년공동사설 등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이 추진해 왔던 강성대국의 비전을 일정한 정도 완성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 역량이 북한 내외에서 입증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먹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정하는 것으로 볼 때 대체로 최소 부족량이 약 64만 톤으로부터 북에서 정상배급 하는 경우 총량이 172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이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같은 곳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면 최소 75만 톤에서 최대 205만 톤까지 금년도에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2007년도는 다시 한 번 북으로 썩는 상당히 혹독한 겨울과 함께 어려운 춘궁기를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북한은 그 동안 체제 생존과 대미 외교에 전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벌여왔고 그런 가운데 북미 직접 대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 북미 직접 대화는 6자 회담의 틀 안에서의 회기 중 회담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현재까지는 비교적 순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2월 초로 예상하고 있는 6자 회담을 통해서 어떤 정도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에서 남쪽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가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북은 역시 실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고, 반보수대연합을 강조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한편 최근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목할 것이 바로 1월 17일 정당정부 단체 연합 성명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인용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 15가 열어 놓은 북남 래왕의 길과 통일 회합의 마당을 더욱 넓혀 나가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업지구 건설을 비롯한 민족 공동의 협력사업을 활

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대략 연합 성명에서 말하고 있고, 1월 2일 김기남 노동당 중앙 위원회 비서는 담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현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하고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 북측이 가지고 있는 2007년도의 여러 가지 희망과 정책적 방향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연합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성명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성명이라는 것으로 방법을 채택해서 이것이 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2006년의 상황과 2007년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역시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이 6자 회담에 대한 틀을 통해서 북미간의 대화를 발전시켜가고 6자 회담을 통한 근본적인 북핵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과정들을 밟아나간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이미 조기수확(early harvest)이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제안이 앞으로 6자 회담에서 어떤 결실을 낼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북도 미국도 결국 이 문제를 긍정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떠나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김계관 대표가 베를린 양자 회담의 결과를 놓고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얘기를 한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또 힐 대표가 그 회담에 대해서 생산적(productive)이었다는 표현을 했다가 또는 그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유용하고 내용 있는(useful and substantial)’이라는 표현을 한 것을 보면 그 내용상에 상당한 의견들을 모아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힐 대표가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는 6자 회담을 열어놓고 그 곳에서 앞으로 논의해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구체적인 합의는 아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외교적 수사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미국과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바람직한 일이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하노이 발언에서 종전 선언이라든가 평화 체제라든가 하는 제안은 사실상 우리 측에서도 그 동안 끊임없이 제시해 왔던 의제입니다만 미국 대통령이 직접 국제사회에 이것을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를 놓고 우리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분석보다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오늘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I. 2007년 통일 정책 목표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본격 가동

저희 통일부에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하나의 방향으로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우리의 제안과 함께 실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6자 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6자 회담에 집중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 대화나 6자 회담이나 어떤 것이든 대화의 틀 속에서 남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운영해 나가면서 평화 체제의 내용들을 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그 동안 국제사회가 진행해 왔던 여러 형태의 제재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교류 협력의 일관된 추진

둘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과제는 교류 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교류 협력은 단기적 안목에서 볼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장기적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해석하고 평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성과 지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박 운항 횟수가 2002년도에 1,800회 정도에서 2006년도에 8,400회로 늘어났다고 하는 이 4년 동안의 성장률을 남북 관계 발전의 지표라고 볼 때, 이는 좀 더 긴 안목에서 본다면 남북간 경제 협력, 나아가서 남북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 경제는 정경분리의 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될 것이며 특히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면 경제와 함께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도 강화되고 동반성장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인도주의 지원의 체계화·효율화 추구

세 번째로는, 인도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이 인도주의 때문에 아주 호되게 비판도 받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

하는 인도주의는 그 동안 정부가 생각해 온 여러 가지 인도주의 프로그램들을 보다 더 체계화해서 정리를 해 보자는 뜻에서 제안했던 것이지 인도주의를 마구 풀어서 지금까지 막혀 있던 것을 해소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동안 인도주의 프로그램은 대략 세 갈래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의 실천, 두 번째는 민간 단체를 통한 인도주의의 실천, 세 번째는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인도주의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형식이 여러 가지로 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긴급 재난 구호도 있었고, 북한에 있는 영유아들을 위한 지속적인 영향과 보건 분야의 지원 사업도 있었고 크게는 비료 지원과 같은 북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지원도 있었습니다. 쌀 지원 같은 경우는 차관형식으로 해서 10년 거치 20년 상환 원칙으로 여러 해 동안 진행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령 구호성 지원과 개발성 지원, 또는 단기적 지원과 장기적 지원, 무상 지원과 차관형태의 지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해서 이제부터는 적어도 이 인도주의 실천을 체계화하고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좀 표현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언론에 전달을 못해서 그 동안 오해의 여지가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주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으로 보다 더 확대해 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역시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고 우리 서로가 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펼쳐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남북간 신뢰 제고

네 번째는 남북간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 방안입니다. 남북간 신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나 신뢰를 쌓아 가는 가장 귀중한 것은 서로 간에 약속한 일을 약속한 대로 지키는 것이고 합의한 것을 합의한 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하고 약속한 일들을 지켜 나가는 데 힘에 겨워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상황의 변화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적으로 합의한 일, 약속한 일을 지켜 나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 동안 남북 간에 진행해 온 합의와 약속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것, 시간이 걸리는 것과 좀 더 방법을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을 구별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급적 투명하게, 우리 국민들도 알고 북쪽도 함께 인정을 하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가려고 합니다.

■ 국민적 합의 기반 확보

다섯 번째는 역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하면서 국내외에 다니며 굉장히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의 폭이 참 좁고, 우리가 너무나 과거에 가졌던 고정관념이나 과거의 경험에 따른 이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개념은 아직도 우리들을 억누르고 있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적 합의는 만들어 내기 위해서, 특히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는 만들어나가는 역량을 키워 내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학계, 언론과 사회가 다 함께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들을 공유하고 펼쳐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평화 교육의 제도화와 평화 교육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새로운 세대들에게 남북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게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와 같은 문제의 가치를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미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의한 평화 교육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평화 교육의 틀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절대 이 평화 교육을 말할 때 장관 한 사람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평화,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반도에서 이룩해 가야 할 평화의 가치와 이념과 목표를 함께 논의해서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교육적 내용으로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런 것이 오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이 자기 의지를 통해서 평화 교육의 내용과 형태와 진행 방향까지 다 결정시킬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 정권에서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욕도 목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에 미래 지향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체제, 한반도의 평화 공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동지역의 갈등구조와 전 세계가 열병을 앓고 있다시피 한 근본주의 기독교와 근본주의 이슬람과의 종교적인 대결, 또는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인종간의 대결들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구축해 갈 수 있으며 그 평화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의 가치를 그들에게 아픔으로 주는 게 아니고 희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야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위한 토대를 이런 방향에서 만들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에서도 이런 문제를 한번 주제로 다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Ⅲ. 통일 정책 4대 실천 과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결국 저는 네 가지의 당면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 단계에 돌입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는 문제를 여러 가지 운영원칙과 체계화를 통해서 재정립하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 대화의 원활한 합의를 통한, 그리고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일정한 희망을 만들어 가면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는 북한의 경제적 변화, 혹은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남북 대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운명은 국제사회에 맡겨놓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북 간에 머리를 맞대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아픈 것은 아픈 것대로 또 고민할 것은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2007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한 희망의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남북 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까지 이르렀고 모든 어려움은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과감하게 해결해 가면서 양측 간에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남북 간에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어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제 중 빠진 부분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래도 화두가 남북 정상회담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살아있는 현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1월 13일자 한국일보 보도를 보고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반응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장관님이 보시는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그 조건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4억5천만 달러의 대가가 있었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부임 후 40일 만에 처음으로 개성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북측에서 시대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아산 측에서 개성 관광도 얘기가 나왔고 1월 20일자 김기남 노동당 비서의 발언이 상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장관님이 가시기 때문에 북측에서 상당한 배려와 신경을 쓰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가셔서 북측에게 장관급 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질문은 아니고 작년도 4월에 이종석 장관이 이 자리에서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토론자였는데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평양에 열네 번 갔는데 북한 사람들이 이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북한과 뭔가 잘 해 보겠다는 사람을 잘 도와주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석 장관께서는 그런 면을 신경쓰시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철도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종석 장관이 북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중에서 상당한 종교적 신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정책적 신념 사이에서 40일 동안 언론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측에 대해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북측에 협조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상당한 기술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북측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북측에서 꼭 협조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이 그 동안 40년간의 남북 대화의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과 마지막 제 토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면서 언론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남교수와 이런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로 앉는 게 처음입니다. 오늘 감동적입니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은 어제 대통령께서 늦은 저녁에 국민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더 사족을 붙이거나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열려있는 과제 같이 말씀하셨고 저는 살아있는 과제라고, 살아있는 현안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6자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고 6자 회담 속에서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가야 할 목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 19 합의에 대한 초기 이행과 구체적인 이행사항까지 아마 6자 회담에서 논의가 될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6자 회담에 대한 진행사항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남북 정상회담은 비록 살아있는 현안이고 열려있는 과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도 아니고 또 논의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는 남 교수의 입장에서 이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조건은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과거와 같은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 문제는 조건보다는 오히려 우리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한 공동의 과제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 과제 중심의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남북정상회담은 현 단계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자 회담의 진행을 보고 6자 회담에 집중할 단계이지 정상회담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논의가 된다면 이것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혹은 한반도의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이익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개성에 가는데 정말 저도 처음 갑니다. 저는 1998년 5월에 종교계를 대표해서 평양에 처음 방문한 바가 있었고 그 이후에 금강산을 두 차례 배편으로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만 개성은 처음입니다. 더구나 휴전선을 넘어서 가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상당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저는 오늘 개성 공단을 방문하면서 처음 방문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배우고 어떤 상황인가를 느끼고 그런 지극히 초보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계획이지 구체적인 제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특히 한미 FTA에서 거론되고 있는 과제들, 또는 개성 공단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 또는 한반도 경제 개발, 경제 발전에 어떤 역할과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그런 말씀을 드

렸습니다만 개성공단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남북 간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성공단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이 발전은 역시 평화나 통일의 개념보다 경제 논리에 의해서 혹은 경제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남교수가 저에게 경고성 충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측에 대해서 너무 급실대고 좋은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꼭 시인도 부인도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북 관계를 처음 시작한 것이 1988년입니다. 스위스에 글리온(Glion)이라는 곳에서 제가 남쪽 기독교 대표로 참석해서 북한 기독교 대표와 세계 기독교 대표가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북기독교가 공동으로 8. 15의 예배를 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합의문을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합의문을 만드는데 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 이래 계속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해 왔었는데 저는 이 남북 간의 관계를 해 오면서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전제나 기구적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에서 제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저도 개성 일을 하기 때문에 일찍 발언을 하고 자리를 떠야겠습니다. 장관님께서 평소 소신을 차분하게 얘기해 주셔서 아마 참석 한 모든 분들이 이해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개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향후 5년 동안의 지도자를 뽑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치 논리가 앞서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민족적인 과제라든가 현안 문제가 자꾸 뒤로 밀리고, 특히 작년에 부동산 문제라든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마치 경제 문제와 남북 문제, 평화 문제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공기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분단 국가에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 안보 문제, 평화 문제가 잘못되면 정치·경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평화 문제, 안보 문제는 공공성의 문제이고 누군가 이것을 잘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북한 핵실험 때도 평소 같으면 사재기가 있고, 주가가 요동치고 외국 투자가가 도망가는데 약간은 그런 게 있었지만 국민이 크게 우려하는 만큼은 아니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어떻게든 간에 남북 관계에 수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그 만한 신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국민 경제가 어렵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부동산 버블이 문제라고 하면서 평화문제나 남북문제는 뒷전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관님께서 우리 국민경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남북 경협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활성화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 놓으시면 그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김정태 회장이 계시지만 평생을 남북문제에 모두가 다 몸을 던져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또 윤만준 사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 데 남북문제, 남북경협,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우리의 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국내 여러 가지 노동시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이나 일본이 북한에 선점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를 조금 구체적으로 펼치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최근 6자 회담이나 핵심적인 유엔의 제재 등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북미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북한의 위폐문제인데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1월 7일자 독일의 알케마인지(紙)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위폐는 미국의 CIA가 워싱턴 DC 근교에서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미국에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6자 회담이라든가, 북미 관계 악화라든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나 시민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 대처할 용의가 있으신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 먼저 장관님께서 이번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남북 관계의 충수를 맡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우리 장관님들이 정치적인 관계로 회담도 제대로 잘 안 되고 큰 진전도 없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6. 15가 발표된 지도 7주년이 되고, 남북 교역이 시작된 지도 1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과 교역 관계가 성숙한 열매를 만드는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장관님 취임하시기 전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질책을 받으셨습니다. 친북이다, 좌익이다 그런 억울한 마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기회에 개인적인 소감으로, 혹은 성직자로서 마음에 거리낌 없이 후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남북교역은 정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교역만 가지고는 남북 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됩니다. 정부와 민간 교류가 함께 했을 때만 한 수레 두 바퀴가 되어서 같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협력기금 사용을 보면 국제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단체 활동도 거의 다 대부분 정부 지원이고, 지금 개성 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도 정부 시책으로 해서 15억 달러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실질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북한 측에서 보는 가치는 사실 너무나 미미합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해 봐야 1년에 2천만 달러 정도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그마한 중소기업 하나 정도의 결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론이라든가 정치인들이 남북 경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조그마한 중소기업이고 교역업체이지만 정부의 지원도 다 해 봐야 돈 천만 달러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언론이든 지식층이든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 교역을 정상적으로 하고 상호주의를 도입시켜서 공동이익을 창출하려면 그것이 좀 더 커져서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참여정부 마지막으로 통일부를 맡으셨는데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잘 처리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 원장)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성공적인 통일부 장관님으로 기억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한나라당 집권을 막으라는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은 통일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계획대로 순조롭게 수행하기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장관님이 말씀하신 6자 회담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 같고 미국도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이 생각하는 북한의 최악의 상황은 대선 정국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추가해서 북한이 자꾸 남한에 대선 정국에 개입하려는 조선중앙통신의 발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계산된 정책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는 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먼저 이장희 부총장님께서 질문하신 건 코멘트이고 하나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을 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북에게 유리한 것 보다는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한, 우리의 경제 활로는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출구라고 이해가 됩니다. 가령 개성공단이 작년 12월 말 통계를 보면 12월에 들어서 처음으로 생산량이 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북측에 11,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회장이 평양에서 투자해서 합영회사 만들어 운영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큰 틀에서 본다면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이 지향하는 것처럼 동북아라는 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결국 경제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건 대단히 소중하고 구체적인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BDA(Banco Delta Asia) 문제는 지금 실제로 BDA 관련 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북미간에 어떤 형태로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도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보도 내용의 진의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우리로써는 그런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정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역이 이제 15년의 역사, 성숙한 단계까지 가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은 연도로 보면 그렇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이 부분들을 아주 짧은 임기지만 최선을 다 해서 채워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북 교류 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하나의 문제점을 제시한 것은 역시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인도주의 실천의 체계화의 일환으로 교류 협력기금을 사용하는 원칙과 분배의 방향,

그것에 대한 효율성 문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친북 좌파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6. 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도 모르는 어리석은 통일부 장관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6. 25 전쟁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원전부터 한국 책까지 꽤 유명하다는 책은 15권정도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6. 25 전쟁은 남침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굳이 이것을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렇게 단선적으로 혹은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다 보고 계산해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황하게 남침인데 그 배경에는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었고, 전쟁의 의도가 이랬고 하는 얘기들을 설명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서 그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고 지나가고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큰 닢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것 저것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려서 저로써는 유감스럽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6. 25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전쟁에 대한 경험 속에 청소년시절에는 전쟁놀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6. 25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정말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피난도 부산까지 갔다 왔고 수복해서 돌아와 보니까 저희 동네 앞산 뒷산에 아군과 적군의 시체가 즐비하게 늘어 있고 동네에 있는 탄약고에서 탄약 훔쳐다 총놀이를 하고 살아온 것이 저희들의 생활입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북진통일이 목적이었고, 멸공통일이 그 당시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철이 들고 세상을 살만큼 살고 저도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이려고 와서 통일부까지 와서 가만히 인사청문회 하면서 이런 정도의 논의 과제에 지금도 서 있어야 하는가 그런 안타까운 심경도 순간 있었습

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여지를 만들어줬다는 건 제 불찰이고 지금 생각해 봐도 제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이 좌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온 일도 없습니다.

제가 올 해로 성직을 받은 지 35년이 되고 성직자와 신학자로서 제가 제 본분을 지켜왔습니다. 남 교수도 종교적 신념과 정책적 신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배경이나 종교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념적 차별을 넘어서서 평화의 세계를 구축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세계,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향이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 가르는 것, 차별하는 것, 그것은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남을 어떤 형태로든 비방하고 폄박하고 그것을 압박을 가하는 것은 더 큰 최악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적어도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책임을 맡은 입장에서 종교를 제 정책의 기본으로 삼거나 그것을 가치로 해서 목표로 해서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해 갈 것입니다. 다만 김정태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 자리를 통해서 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들의 염려를 덜어드리는 입장에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준 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6자 회담도 무너지고 북미 관계 전혀 희망이 없어지고 북이 마침내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에 들어가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미래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경우 더 큰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고 국제사회의 제재라고 하

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압박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공개된 포럼에서 우리의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라는 걸 얘기하는 건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가정하고 안을 만들거나 은밀하게 어떤 정책적 대안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공개적 자리에서 토론하는 건 적절히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보다는 오히려 이 상황이 잘 갈 수 있도록 6자 회담도 잘 가고 북도 여기에 잘 응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은 분명히 희망과 새로운 한반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그 방향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규 국제디지털대학교 부총장) 저는 장관님께 질문 겸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통일 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느낀 경험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적 합의와 관련되고 장관님 말씀하신 남북 관계는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라는 말씀과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장관님도 그러셨지만 통계적인 수치를 많이 활용합니다. 인적 교류가 많이 증가했다든가 또는 교역 액수가 증가했다든가, 그런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국민들에게 돕는 데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이해와 존중이지 어디 상호적인 이해와 존중이나, 예를 든다면 극단적인 예로는 핵실험도 그렇고 미사일 실험도 그렇고 정상회담이 이후 벌써 7년이나 되어 가는데 이게 어떻게 상호 이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선군 정치가 남측을 방어해 주고 보호해 준다는 이러한 언급을 들면서 어떻게 그것이 상호간의 이해나 존중이나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 차원에서의 변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북 지원의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집권층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북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경우 수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떠한 면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이 있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아예 상호 이해 존중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부 정책의 모순점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러한 차원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장명봉 국민대학교 교수) 저는 법학교수이기 때문에 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북에 몇 차례 다녀오면서 가져온 법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북은 아시다시피 2004년에 대중용 법전을 펴냈고 작년 6월에 평양에 가 봤더니 그 법을 이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을 망라해서 만든 증보판 법전이 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북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비공개로 해서 우리가 자료 수집하기에 어려움을 겪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 공개하는 이런 법전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져온 법전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적어도 규범적 목표 내지 이념적 목표로 설정했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든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사라져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내용이 상당히 실용적으로 변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개방을 지향해 나가는 방향으로 법 내용들이 변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법제 면에서도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대북 정책과도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대북 포용정책이라든가 6. 15 이후의 정책의 영향도 받은 바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관급 회담이 재개되리라고 보고 2007년이 희망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법제 면에서 남북간

의 협력 체제를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 법제 측면지원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북한이 법제 정비 지원도 통일부의 중요한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교시에 의한 통치로부터 법에 의한 통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남쪽에서 해야 될 하나의 시대적인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급 회담에서도 남북 법률 위원회 설치라든지 과거에도 법률 실무 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둔다는 합의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법률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두어서 법제 면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대표) 저는 장관님께 컴퓨터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컴퓨터 모니터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DJ 정부 때는 승인이 나서 했는데 현 정부 오면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북핵 문제로 인해서 몇 년째 생산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통일부에서 승인을 해 줘서 컴퓨터 도서를 3만권 평양에 전달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전달했을 때 그 책이 학계 교수님들이 얘기할 때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 아니냐, 이게 어떻게 가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전달하고 저희가 교수님들과 10월에 북측 김책공대 학장을 만나서 토론을 했는데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제가 12월에 또 평양에 갔을 때 김책공대 3층 서고에 별도로 남측이 지원한 책을 서고로 만들어 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어 통일을 하고 교류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김책공대의 책을 서고를 만들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컴퓨터 용어를 한글로 표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웹하드 같은 것도 한글로는 이해를 못하고 영어로만 이해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이 많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저쪽에서 우리와 같은 용어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느끼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책 지원에 있어서

컴퓨터라는 용어만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불허하기보다는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관님 말씀의 주 내용을 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가 남북 교류 협력이라든가 인도주의라든가 국민적 합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국민적 합의에서 평화의 교역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젊은 세대들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 하시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북핵 문제가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북핵 문제가 6자 회담에서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3원칙이라고 할 때 우리가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또는 대화에 의한 해결, 적극적인 역할 이렇게 3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북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 대화적 해결 두 개가 상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과 현실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두 원칙이 서로 갈등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질문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핵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상충될 때 우리의 원칙적인 자세는 무엇이나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개의 원칙 중에 더 우선하는 원칙이 무엇이나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두 개의 원칙 중에 북핵 불용의 첫 번째 원칙이 우선한다면 평화적인 해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상충할 때는 분명히 제1원칙이 더 우선한다고 이렇게 신문 기사를 써서 언급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질문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박영규 부총장께서 새로운 자리에 옮기셔서 좋은 직책을 맡으시고 좋은 역할을 하시게 된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 지수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아직 밖에 발표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통계학자들과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표도 만들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총장님의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통계 수치를 가지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도 없고 이런 통계 수치가 하나의 무슨 발전의 지표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해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떻게 변화가 됐고 또 그 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왔으며 상호 이해 부분은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밝혀 나가봐야 무슨 처방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경우에 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류 협력이 이루어진 역사가 일천합니다. 6. 15 공동 선언이 있는 다음부터 비로소 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북을 만날 때 마다 여러 가지 장벽같은 것을 많이 느끼고 얼마나 우리가 서로 다른가에 놀라고 그런 상황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부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그런 발전 과정 속에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원을 방문하고 하나원에 소속되어 있는 한겨레 학교라는 곳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하나원에서는 새터민들에 대해서 10주간 기본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약간의 기초적인 직업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냅니다. 한겨레 학교라는 곳은 일반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따로 일종의 대안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이 학교를 짓는 데 터를 구하고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데 동네 사람들의 반대로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상호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이해가 상당히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한겨레 학교 짓는 것을 탈북학생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둘 수 없다는 현실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서글픈 현상입니다. 사실 이런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평화 통일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평화 교육도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들이 대부분 일반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80% 이상이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가 전부 우리 학생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적응을 못해서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좌파 친북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니까 실제로 북에서 온 아이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남북 간의 상호 이해는 아직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장명봉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제안이고 그런 면에서 법제는 잘 살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에 있을 때 북의 상속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법률 변화에 대한 것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연구해 볼 과제라고 봅니다.

유완영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은 좋은 경험이고 역시 이런 면에서 적극적인 교육계와 함께 도서 보급 관련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진행해 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남궁영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기자 회견할 때 마다 한반도 평화의 저해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북핵이고 또 하나가 북의 빈곤문

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의 수석 부회장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자칫 동북아시아의 핵 경쟁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더욱 북과 한반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얘기는 전제하고 얘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변함없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반드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둔 채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의 인권 문제나 경제 문제가 우크라이나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렇게 상당한 발전의 도상에 올라간 것도 핵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국제사회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고 그 방향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아까 말씀하신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과제이지 절대 상충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세계 어느 나라이건 핵문제 해결할 때 평화적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핵문제를 평화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의 예를 보더라도 핵문제는 평화적 해결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화적 해결 방법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을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해결이나 국내 사회 정치적 해결이나 군사적 해결이라는 문제들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원칙에서 정말 흔들림 없이 진행해 가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평화적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성규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부장) 기자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가지 당면 과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북한의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적극적 계획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적극적 계획을 가질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지 않고는 평화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적극적 계획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네 번째 과제로서 남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연결해서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정상회담 관련해서 6자 회담이 어느 정도 진행상황을 보고 현재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나중에 적당한 단계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상회담이 죽지는 않겠구나, 살아 있는 현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단계가 과연 적절한 단계냐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6자 회담이 곧 재개되고 진행이 되지만 어느 단계쯤 되면 우리가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남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하는데 오늘 개성에 가서 상대방한테 우리 대화 좀 하자는 장관급 회담을 제안하실 생각이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팁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먼저 남북 관계의 정상적인 복원, 남북 대화라든가 교역의 활성화라든가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역시 활성화되려면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일정한 정도 풀려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6자 회담이 어떤 형태로든 일정한 합의와 실행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해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역이나 이 문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는 보다 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경제는 리와 기업적 개념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 기업체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한 EU상공회의소가 이번 금요일 오찬 강연회를 부탁해서 경제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적어도 교역에 대한 방향 설정을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초청 강연을 수락했습니다. 정상회담은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남북회담, 장관급 회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실무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분적으로 이런 저런 형태의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개성을 방문하는 것도 일정한 정도의 남북간의 만남과 대화의 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저는 핵 문제 혹은 제재의 상황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대화라는 것은 좀 더 큰 틀에서 연구하고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장 오늘의 시점에서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혹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이건 남북 장관급 회담이건 남북간 실무 회담이건 혹은 적십자 회담이건 어떤 회담이든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놓고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족스럽게 대담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길정우 중앙 m&b 대표이사) 올해는 아무래도 국내 정치의 해라서 대선 후보들을 한 분, 두 분씩 모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순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일정을 잡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07년 국내 정치·경제 모두 암울하게 보는 와중에 남북 관계에 희망을 주신 장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도처에 닳이 깔려 있음을 직접 경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특정 세력이나 집단이 의도를 갖고 깔아놓은 닳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처해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창출하는 닳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정 장관님께서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을 해주시기를 믿고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리 및 교열

이해정 연구원 (hjlee@hri.co.kr) ☎ 02-3669-4487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1	2002	2003	2004	2005(P)	2006(E)	2007(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3.8	7.0	3.1	4.7	4.0	4.8	4.2
	최종소비지출 (%)	4.9	7.6	-0.3	0.4	3.4	4.2	3.7
	민간소비 (%)	4.9	7.9	-1.2	-0.3	3.2	4.1	3.5
	총고정자본형성 (%)	-0.2	6.6	4.0	2.1	2.3	2.9	2.5
	건설투자 (%)	6.0	5.3	7.9	1.1	0.4	0.5	1.5
	설비투자 (%)	-9.0	7.5	-1.2	3.8	5.1	7.5	4.5
대 외 거 래 준 거 기	경상수지 (억 \$)	80	54	119	282	166	30	-30
	무역수지 (억 \$)	93	103	150	294	232	170	100
	수출 (억 \$)	1,504	1,625	1,938	2,538	2,844	3,250	3,550
	증가율 (%)	(-12.7)	(8.0)	(19.3)	(31.0)	(12.0)	(14.3)	(9.2)
	수입 (억 \$)	1,411	1,521	1,788	2,245	2,612	3,080	3,450
	증가율 (%)	(-12.1)	(7.8)	(17.6)	(25.5)	(16.4)	(17.9)	(12.0)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4.1	2.7	3.6	3.6	2.7	2.5	2.8
	실업률 (%)	3.8	3.1	3.4	3.7	3.7	3.5	3.7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91	1,253	1,192	1,145	1,024	955	925
	국고채금리 (평균, %)	5.7	5.8	4.6	4.1	4.3	4.6	4.4